

김 형 섭(金亨燮) |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협력과장, 산업폐기물과장, 환경기술과장, 유역제도과장,
지구환경담당관)
주케나대사관 주재관 등 역임
tel. 031-790-2400 | kimhs55@korea.kr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한강의 행복벨트를 꿈꾼다

환경부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이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천변에 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장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토지를 매입하고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호와 남한강(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안 500m~1km 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이후 한강 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확대 실시되었다. 현재 한강 수계의 수변구역 지정면적은 경기도(남양주시·용인시·광주시·가평군·양평군·여주군), 강원도(춘천시·원주시), 충청북도(충주시)에 걸쳐 약 190km²에 이르고 전국 4대강 수계에 걸쳐 약 1,000km²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변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Ⅰ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사회분위기 Ⅰ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은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팔당호 상류의 양평군, 남양주시,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는 '99년 이후 10년 동안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오염유발 시설이 20%이상 증가하였고 인구는 19만 명에서 45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팔당 상수원 상류의 오염유발 요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수질은 점차 개선 추세로 '99년 팔당호 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5ppm에서 2010년 1.2ppm으로 깨끗해졌다. 이는 오염원과 인구는 증가했지만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수를 통한 수변녹지 조성 등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꾸준한 노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Ⅰ 단순한 수질개선 뿐 아니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에도 효과적인 정책 수단 Ⅰ

토지매수 사업은 토지매수를 통한 오염원 제거 및 녹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성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환경기초시설 등의 점오염원 처리시설과는 달리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현재 녹지조성은 협의매수의 한계로 인해 녹지 벨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간 6,550억원을 투자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10km²를 사들여 녹지를 조성했다. 이는 약 156kg/일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수질개선효과(배출허용기준 10ppm일 경우, 하루 배출량 100m³규모의 공장 약 156개를 폐쇄한 것과 동일)와 연간 약 9,800톤의 CO₂를 저감하는 효과(2,500 가구에서 배출하는 CO₂량)와 맞먹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팔당호 주변에 난립하는 음식점, 모텔 등 주요 오염원을 사들여 제거하고,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임을 감안한다면 수질개선 효과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할 것이다.

Ⅰ 하천변 오염원 집중 매수 추진 Ⅰ

앞서 밝혔듯이 토지매수는 입지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토지 이용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 원하는 경우에 이를 사들이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한강·북한강·경안천 경계로부터 최대 3km 이내 지역이 토지매수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팔당호 등 한강수계는 개발수요가 많아 하천변에 숙박·음식점, 주택 등이 지속 입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협의매수의 한계로 인해 모든 오염원을 사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환경부에서 생태벨트 조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토지수용 제도가 마련되면 先(선)녹지조성 後(후)토지매수로 효율적인 생태벨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매년 300~400건의 토지매도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토지를 사들일 수는 없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질개선 기여도를 고려한 우선 순위 산정을 통해 하천에서 가깝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10년까지 사들인 총 매수면적에서 임야·전·답의 비율이 7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임야, 전·답의 매수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음식점·숙박시설 등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시설물을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먼저 사들여 개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 사람·환경·개발이 조화되는 수변공간 창출에 노력 |

자연천이를 통해 생태복원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수한 모든 토지에 수변녹지를 조성해왔다. 그간 매수토지에 대한 녹지조성은 주변지역에서 자생하는 우점종 위주의 단순한 조경 식재에 치중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인체에 도움을 주는 피톤치드 체험공간 및 꽃창포, 줄, 수련 등 친환경 수중식물을 활용한 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수질개선 효과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생태학습장(남한강), 양평 양수리생태공원(팔당호), 가평 삼회리 생태복원시범사업지구(북한강)를 테마화하여 연결하는 사업(Tri-Eco-Network)도 추진하여 생태복원에 대한 이해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 깨끗한 팔당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 |

매수토지 중 전·답 및 임야가 73%, 하천에서 50m 이내 지역이 43%에 불과하다는 등의 수질오염 중점 관리지역 매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오염원 발생 토지 및 하천인접 지역의 토지 등이 집중 매수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 산정 배점기준표 등 관련 지침을 개정('10. 9)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선 순위 산정 기준은 하천거리별, 용도별, 규제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하천 인접지역 및 오염원 배출량이 큰 토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비교적 하천으로부터 거리가 먼 토지라 하더라도, 오염발생량이 큰 공장 축사 등은 매수 우선 순위를 산정하여 용도별 점수가 높을 경우 매수하고 있다. 또한, 매수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다시 매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도로변 등 장기적으로 행정계획(도로 확장 등)에 반영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강이 울지 않고, 우리가 울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누리며 후세에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고 웃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강으로
흐르는 한강을 후세에게 물려주었으면 한다.